

한우 제값 받기도 힘든데… 미국산 개방 압력에 구제역까지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원인 구체적 조사 중
“아시아 지역권 바이러스 유입으로 1차 추정”
추가 확산 가능성 높아… 수출 제한 확대 가능
한우협회 “적자 지속 상황서 농가 불안 가중”

국내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수출 중단, 소비 감소 우려가 제기되자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급량 증가로 인한 한우 가격 하락에 국제곡물가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사료값마저 천정부지로 올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소고기 수입 개방압력까지 겹치며 한우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1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남 무안군 구제역 발생 농장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 원인을 아시아 지역권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으로 1차 추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암(1차) 발생을 봤더니 과거에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아시아 지역, 몽골에서 발생했던 유전형과 거의 일치해 상동성이 높다”며 “일단 1차적으로 아시아 지역권 유입으로 추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 기전에 의해서 왔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뒤 14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3건이 추가 확인됐고 15일 무안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자 중수본은 즉각 방역대책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문제는 이미 전남도 내에 구제역이 퍼져있을 가능성이다.

현재 영암·무안·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목포·함평·신안 등 10개 시군의 위기관리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상태다.

특히 1차 발생농장과 약 18km 떨어진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며 이미 도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분명히 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부 (면역력 형성이 부족한) 농가가 있을 수 있어 한두 건 더 터질수는 있지만 일제 접촉하게 되면 형체가 형성되는 시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2주간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제적 원인 규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경우 전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피해가 발생했던 2010년에는 해를 넘겨 피해가 이어지면서 350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축이 살처분된 바 있다. 지난 16일 기준 당국이 발표한 전체 한우 마릿수는 334만 마리라.

구제역이 전국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한우 수출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화 원칙’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사육·도축된 한우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아랍에미리트(UAE)는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 수출을 허용하며 캄보디아는 해당 농장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수출 제한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압력도 농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한우사육 농가구제역백신접종

소고기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한 후 한국은 2008년부터 광우병(BSE) 발생 우려가 적다고 평가되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한우 농가는 강력 대응까지 시사하며 반발 목소리를 냈다.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내년 0%가 될 예정인 가운데 개월령까지 철폐될 경우 한우농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려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현재 가뜰스나 얼어붙은 민생경제로 내수시장이 무너져 있으며 한우농가의 경우 4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한계점에 내몰려 있다”며 “만약 국회와 정부가 강행한다면 협회는 국민들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응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우 1마리의

생산비는 1021만1000원, 판매액은 평균 878만5000원으로 142만6000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작년에는 적자 폭이 1마리당 213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 추산 2022년말 8만7000호였던 농가는 2년 새 1만호가 줄었고 전체 농가의 12%가 폐업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 긴급 백신도 투여하고 있어서 더 이상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이제 지금까지 적자가 계속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 등의 상황을 접하면 농가들이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그래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관세가 내년 제로가 되면 더 저렴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개월령 철폐까지 되면 미국산 소고기가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지역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8% 감소한 32억1300만 달러, 수입은 9.4% 감소한 29억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억3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기계류(11.5%)가 증가했고 석유제품(12.3%), 화공품(21.4%), 철강제품(10.2%), 수송장비(56.0%) 등이 감소했다.

수입은 석유제품(70.9%)이 증가한 반면 원유(6.4%), 철광(2.0%), 석탄(26.0%), 화공품(66.4%)은 감소했다. /신종팔 기자

광주은행, “친환경차 보급 이차보전사업” 금융기관 선정

중소·중견기업 100억 한도 저리 대출·이자 지원

광주은행이 지역 친환경자동차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핵심이다. 주로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시중금리 대비 저리로 융자하며 전용 대출상품과 정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담 취급하게 된다. 금융 지원은 기업당 100억원 한도로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 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 대출이자자는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은 1.5% 한도 내에서 시설·인수합병(M&A) 자금은 8년 이내, 연구개발 자금은 5년 이내 지원한다. 이차보전 사업 지원 희망 업체는 심사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또는 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인 K-PASS에 접속해 신청한 후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해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이차보전 지원사업 규모는 54억원이다. 신청 마감은 공고일로부터 내달 중순까지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친환경차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기관에 지역 금융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 친환경차 관련 부품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는 광주시의 지원으로 지원 금융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지역 친환경차 부품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친환경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1천680억

스마트 김 종자 생산시설 등 4대 분야 79개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총 1천 680억 원을 들여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 4대 분야 79개 사업을 추진, 전남 수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친환경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양식어업 육성 지원,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계 조성, 어업인 안전 및 복지 실현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분야의 경우 747억 원을 들여 육상 양식 어가에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인증비와 국제인증비를 지원하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한다.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7억 원을 들여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위한 종자 공급사업, 어류양식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매년 발생하는 어업재해에 따른 양식 수산물 폐사체 처리와 재해보험료 등에 67억 원 지원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

호를 위해 165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해삼 씨뿌림 사업과 인공어초 설치 및 유해 생물 구제사업 등을 추진한다.

수산생물의 서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바다숲 조성 면적 확대도 블루카본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어선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84억 원을 들여 안전보험료와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항포구에 인양기와 부잔교 등 어업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선박 화재감지기, 구명조끼 등 조업 안전 장비를 보급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지원 매뉴얼을 개정했다.

전북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운 전북 양식어가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4대 분야 사업을 촘촘히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활기차고 웃을 넘치는 풍요로운 어촌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